#### 데스크 시각

박 진 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할리우드는 이방인과 외국인들로 가득한 곳이다. 만약 그들을 쫓아낸다면, 우리는 예술이 아닌 미식축구나 종합격투기만 보게 될 것이다." 제74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린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LA 베벌리힐튼호텔. 축제 분위기가무르익을 무렵, 평생공로상을 받은 메릴스트립의 묵직한 수상 소감이 울려 퍼졌다. 대선 후보 시절에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일침이었다.

이날 스타들의 수상 소감에서 기자의 마음을 유독 사로잡은 건 영화 '라라랜드' (La La Land)로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 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이었다. LA에서 따온 듯한 '라라랜드'는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시라는 뜻으로 올해 뮤지컬 부문 골든글러브 7관왕을 차지했다. 엠마스톤은 영화의 '오디션 신'을 떠올리게 하는 비장한 어조로 젊은 예술인들을 향해

## '라라랜드'와 문화 광주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경험을 한 젊은 예술인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세요."

#### 꿈과 열정의 '예술 도시'

영화의 줄거리는 고전적이다. 20대 중 반의 미아는 배우의 꿈을 안고 시골에서 할리우드로 이사 온 커피숍 종업원. 어린 시절 영화를 좋아했던 이모의 영향을 받 아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뒤 5년째 오디 션을 보러 다닌다. 커피숍 '알바'(아르바 이트)는 오디션을 위한 생계 수단일 뿐.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재즈 피아 니스트 세바스찬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 다. 힙합이나 전자음악에 밀려나는 재즈 클럽을 도심에 여는 게 소원이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주변의 우려에 "위기는 인생 이 내게 던지는 펀치다. 피하지 않고 맞서 다 보면 카운터펀치를 날릴 순간이 올 것"이라며 꿈을 키워 간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현실은 좀처럼 달라 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바스찬은 밀린 방세를 내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느라 바쁘고 미아는 2~3분도 주어지지 않는 '오디션 투어'(?)에 점점 지쳐 간다. 급기야 오디션에 염증을 느낀 미아. 자신의 이름을 걸고 1인극을 무대에 올리지만 처참한 실패로 끝나자 짐

을 싸 들고 시골집으로 내려간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아는 1인극에서 그녀의 연기를 눈여겨본 영화 관계자로부터 마지막 오디션을 제안받는다. 핀 조명이 내리꽂는 오디션 무대, 그녀는 어린 시절 이모와의 추억으로 이야기를 풀어 간다.

"꿈을 찾아 파리로 떠난 이모는 추운 겨울날, 맨발로 센강에 뛰어들었다가 한 달 내내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놀렸지만 이모는 다시 그때로 되돌 아간대도 그렇게 할 거래요. '무언가에 살 짝 미쳐 살아 본다는 건 새로운 빛깔로 세 상을 보는 비결'이래요. 화가와 시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도 거기에 있다면서…"

#### 블랙리스트 없는 세상은

정유년 새해,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라라랜드'가 관객 300만 명을 육박하며 흥행 중이다. 뮤지컬 영화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꿈꾸기조차 버거운 현실과 고군분투 중인 요즘 2030세대들의 대리만족이 반영된 듯하다.

하지만 영화는 열정을 잃지 않는 예술 가들의 삶을 그렸다는 점에서 요즘 '블랙 리스트'로 뒤숭숭한 한국의 문화예술계 와 오버랩된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입 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을 가려내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 왔기 때문이다. 사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매년 정부 예산 과 기금으로 문학, 미술, 연극, 무용 등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술인이 나 단체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예술인들의 수입으로는 작품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광주 지역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7%가 평균 연간소득이 999만 원 이하였으며 절반가량이 생업을 위해 작업실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난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는커녕 개인적 정치성향이나 과거 활동을 트집 잡아 돈과 권력으로 길들이려고 했다니.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참 나쁜' 정부다.

모름지기 문화 선진국과 도시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북돋워 주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재가 바로 예술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올해는 예술인이 '라라랜드'에서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키워가고, 그리하여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덧붙여 혹여 잇단 시련으로 좌절에 빠진 예술인들이나 젊은이들이 있다면, 잊지 마시라. 언젠가 '결정적 한 방'을 날릴 인생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jhpark@kwangju.co.kr

## 社 說

## 김영란법 피해 구제는 설 이전에 이뤄져야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등 장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 명 김영란법)이지만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 우려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현 실로 드러나고 있다. 설이 다가오면서 명절이 대목인 소상공인들도 김영란법 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영난 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유일호경제부총리와 만난뒤 "김영란법으로인해 농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서도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줄여서 가능한 빨리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당에서는 명절 대목 등 특정기간에 라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판매를 장려하는 기간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새 국내 외식업 매출은 25%, 농수축 산업 도소매 매출은 36%가 줄었다. 대 형식당과 연회장도 예년 대비 20~ 30%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초 김영란법의 안정적 정착에 무게를 뒀던 권익위도 관련 부처와 개정안을 협의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법 시행 후 농수축산, 외식, 화원, 유통, 여가 업종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누차 지적한 바이지만 농수축산 및 소상공인 업종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 및 적용 가액 현실화 등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에게 설대목을 돌려줘야할 것이다.

## 잡범처럼 증거 은닉한 김기춘 구속수사를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전격 소환됐다. 특검팀은 김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 트를 작성하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의 방어도 만 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검찰은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있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거의 손 도 대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긴 상 대다. 김 전 실장은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며 특위 위원들의 질문 공세를 교묘하게 빠져 나가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여기에 김 전 실장은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마치 잡범처럼 핵심 증거의 인멸 을 시도한 정황이 폐쇄회로TV 기록 등 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는 30대 검사 시절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에 올랐고 유신헌법도 주도적으로 제정했다. 전두환 정권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를 돕는다며 해결사를 자처하기도 했으며 제6공화국에서는 황태자 박철언 씨에게 충성편지를 써서 50세 나이에 검찰총장에 오르는가 하면 법무장관까지 꿰찼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부산 초원복국집에서 기관장을 불러 지역감정을 조장했고 그가 다룬 수많은 간첩 사건에서는 고문 피해자가 속출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그가 주도한 여론 조작의 대표적 사례다. 특검은 이제 김 전실장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힌 뒤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통해 구체제하에서 일그러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것이다.

### 은펜칼럼

##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박 홍 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매일 한번 이상은 남광주 고가도로를 통과한다. 출·퇴근 길이든, 업무상 이동을 하는 경우든 거의 매일 그곳을 지난다. 밤에도 가끔 지난다. 고가도로를 지날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을 때도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지만 완성되고 나서는 더욱더 가관이다. 35층 아파트장벽은 위압적이고, 외벽 컬러는 산만하고 어지럽다. 유선형 고가도로바로 옆 콘크리트 절벽은 운전자에게 강한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 밤에도 자유롭지 않다. 최상층부 붉은 띠 조명은 낮의중압감을 다시 연상시키며 빛 공해와 더불어 엄습해온다.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고층 아파트 장벽을 보면서도 도대체 '뭐야'라고 외치 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남광주 고가도 로 옆 아파트는 그곳보다 더 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나만이 아니다. 도시 환경과 경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 모두 같은 느낌의 이야기를 한다. 일

반 시민들의 이야기도 그렇다.

그런데 더 '무서운 놈'이 오고 있다.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 주변이다. 44층 초고층아파트 숲에 3500여 세대다. 뉴스테이(New Stay)라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경관, 가로패턴, 금남로변 가로환경, 광주천변 조망환경, 바람길, 일조 등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옛도심에, 초고층, 대단지, 주변과 부조화, 중소형 '임대주택' 등등이 가질 수 있는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 커뮤니티 형성, 삶의 생태계 변화 등 인문·사회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긴 오직 사업성만있을 뿐 삶의 환경에 대한 배려가 빈약하다.

이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상상이 안 된다면 남광주 고가도로변 아파트단지에서 느껴보면된다. 그곳보다 30m 더 높다. 세대수는약 3배 많은 3500여 세대다. 누문동 옛 도시구조에서 이런 대규모의 성냥갑 아파트 단지를 상상해 보라. 현재 추진대로 완성된다면이 단지는 물리적·인문적·사회적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장래 광주의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70여 년 전에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은

말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고. 유기체처럼 변화무쌍한 도시 환경을 보면서 이 말이 주는교훈을 되새겨 본다. 인간은 도시·건축환경에 곧바로 적응을 잘 한다. 안 좋은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환경에 적응하며그 영향을 받는다. 극소수 몇명의 경제적이익을 위해 잘못 만들어진 도시 환경은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평생, 또 그 후손에게도 평생 좋지 않은 환경을 대물림하게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지는도시환경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좋은 삶의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가져야한다.

첫째,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자. 지역·지구별로 도시 규모나 경관을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그래야 도시 괴물(?) 출현을 막을 수 있다. 후손에게 어떤 광주 도시환경을 물려줄 것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다. 이미 여러 규정들이 있다. 환경과 경관, 인문·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세밀한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익' 앞에, '공익'을 외치는 소리는 작은 메아리로 사라질 것이다.

둘째, 입체적 심의방법을 모색하자. 현 재 심의는 일반인이 평생 한번도 볼 수 없 는 시점의 투시도나 조감도, 2차원 도면 을 가지고 심의한다. 심의위원들의 3차원 상상력과 예지력에 의존할 뿐이다. 이는 판단에 많은 오류를 낳고 있다. 주변과 단 지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과 동영상을 활용하자. 어렵지 않 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단지의 공 간구성과 동선계획에 인문·사회적 환경 과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도시사회학적 고려사항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셋째, 삶의 생태계를 복원하자. 도시는 살아 움직인다. 삶이, 문화가, 사회와 기술변화가 도시 생태계 변화를 부른다. 눈앞의 이익으로만 미래 환경을 논한다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도시 환경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고, 후손들도 빌려써야할 공간이다. 우리가 망처 놓는다면 그만큼 내 자식이, 우리후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게될 것이다. 삶의 환경생태계가 선순환 될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고 지키고 관리해야한다.

결국, 몇 사람이 만드는 건축 환경이 대 다수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 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 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 는 코너입니다.

#### \_\_\_\_ 기 고



김 하 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1,2월 한·중간의 전세기 운항도 금지시켰다. 중국의 춘절(우리의 설날) 연휴는 보통 열흘 이상 휴일이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업계는 물론 이와 연관된여러 분야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 내 주소를 쓴 글자 하나만 틀려도 세관에서 통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5년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631조 원인데, 이 중에 대중국 수출액은 164조 원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6%를 차 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압박이 갈 수록 강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커다

# 한·중관계 해법 찾아야 할 때

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탄핵에 처한 현 정권이 이런 중국의 압박에 아무런 대 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우리 나라의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더 암울하기만 하다.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까지 전남도의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724만 달러였다. 2015년 같은 기간보다 43.7% 늘어난 것으로 2013년 4308만 달 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는 전복 950만 달러, 김 630만 달러, 미역 41만 달러 등으로 수산물이 수출을 주도 했다. 만약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전남 농·어민이 받는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중국은 WTO에 2001년 가입했지만, 우리나라, 필리핀, 노르웨이, 일본 등과 같은 다른 나라와 분쟁이 발생할 때 경제 적 보복조치를 취했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중국이 향후 취할 수 있는 경제 보복 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예측 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제품에 대한 통 관검사, 위생검사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 강화, 둘째로 관광 상 품 판매중단, 비자발급 지연 등을 통한 방 한 중국인 관광객 억제, 셋째로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불매운동,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 넷째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 으로 한 노동, 환경, 조세 등의 표적 단속 강화, 다섯째로 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 자본의 철수 등이다.

물론 현재 한·중 FTA가 발효 중이므로 중국이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경제보복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첫 번째, 두 번째의 보복조치는 이미 시행단계에 이르렀다.

사드배치 문제는 크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민족의 명제를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본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경쟁과 군사대결 구도로 나아갈 조짐이 짙어지고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현실이 역설적으로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초래할 위험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대립구도는 한국의역할에 따라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즉,한국 주도하에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협상이 남북 논의 테이블에 상정되고, 여기서 해결 가능한 프로세스가 논의된다

면, 이를 기초로 미·중의 대립구도를 타협하고 해소하도록 계기나 촉매 역할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실험 중단, 한·미군사훈련의 조정, 대북제재 완화, 미·북의 대화채널 가동 등과같은 다양한 카드를 이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드배치명분이 감소할 것이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기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교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유형을 분석하고 현지 정보의 수집, 정부 대용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지역 주력 산업과 품목의 거래선 다변화가 요구되고,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지역기업은 이런 국면에서 한·중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이를 그대로 맹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無等鼓

역사가 된 전일빌딩

광주의 랜드마크였던 전일빌딩의 지 번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다. 금남로의 시작점에 위치한 데다 단일 건물이 지번을 통째로 차지하는 경우 도 드물어 상징성이 대단했다.

전일빌딩은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네 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1968 년 12월 광주 최초의 7층 건물로 본관 이 지어진 후 1974년과 1980년 증축을 거쳐 10층 건물로 완공됐다. 바닥 면적 만 6089평으로 당시 광주에서 가장 크

고 높은 오피스빌딩 이었다. 1996년 '5대 광역시 빌딩 총점검 결과'를 보면 광주무

역회관과 제일오피스텔에 이어 세 번째 큰 오피스빌딩으로 기록돼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광주의 랜드마크 건물이었음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전일빌딩의 역사성은 이곳에 터를 잡았던 언론 매체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옛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의 터전이었으며 호남 언론의 메카 역할을 한 건물이다. 1971년 개국한 전일방송도 1980년 언론 통폐합 때까지 있었다. 옛 전남매일을 흡수합병해 이름을 바꾼 광 주일보가 2004년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옛 연합통신)도 전일빌 딩을 사용해 신문·방송·통신이 한 지붕 아래 둥지를 튼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1970년 4월 6층에 문을 연 전일도서 관은 당시 국내 최초의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광주·전남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의 공부방이었다. 725석의 열람석을 잡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선 대기자들이 전남도청 앞까지 장사진을 치기도했다. 지하의 전일다방은 광주우체국의 '우다방'과 함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고 지금도 1층을 지키고 있는 외환은행

은 전일빌딩 일부 층의 소유권을 아예 사서 사 용할 정도다.

전일빌딩은 소유주

의 자금난으로 2010년 경매에 부쳐진 후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12년 광주도시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철거와 리모델링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최근 국과수가 빌딩 내외부의 탄흔에 대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과수의 추가 조사로 계엄군의 기총소사까지 밝혀지면 5·18 사적지 지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빌딩이 그 모습 그대로 금남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졌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